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시민참여

김연옥, 황용수, 조성경*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번지

명지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38-2

younok@kaeri.re.kr

1. 서론

Vincent T. Covello에 따르면, 위험인식(risk perception)은 어떠한 행위나 상황이 비자발적이며, 피해의 심각성이 클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며 위험과 혜택의 분배가 불평등 할 때 커진다. 또한, 그 주제가 낯설고 복잡할수록 위험인식은 더 높아진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수용 여부는 위험인식이라는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요인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위험인식에 따라 위험 수용(risk acceptance)이 늘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 여부는 위험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사실 뿐 아니라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에 기초한다. 전문가들의 위험인식은 보다 정량적인 요소들, 예컨대 연간 교통사고 사망률 혹은 위암 발생률 등과 같은 수치적 데이터와 객관적 자료 등에 영향을 받는데 비해, 일반 시민의 경우는 통제불가능성, 불확실성, 낯설음 등과 같은 정성적인 요인 등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정성적 요소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위험인식은 바로 사용후핵연료, 넓게는 원자력 에너지가 낯설고 복잡하며, 통제가능성이 적다라는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지난 20년 동안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의 역사는 결국 이러한 위험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폐장 부지 실패 경험은 정부 및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의 접근법을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정부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방식이 추진 중이다.

2. 사용후핵연료와 시민참여

참여라는 개념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시민 참여는 공청회와 같이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점점 그 개념이 발전하면서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에서 말하는 시민참여의 개념은 결정된 정책에 대해 시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개념은 '숙의적(deliberative)' 시민참여를 의미하며 숙의적 시민참여는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는 의견이나 선호도에 대한 수렴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학습 그리고 토론 등과 같은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형성하는 공론을 확인하고 합의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공론화 대상과 시민 참여범위

최근의 공론화 논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ask force team (TFT)의 권고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론화 대상은 먼저 중간저장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장기 관리 방안에 대한 각종 개발 연구의 계획 등을 정부가 밝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저장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범위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복잡한 기술적 부분들도 공론화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 조사/연구까지 시민참여의 범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은 기술적 사항 이외에 부지 선정 등과 같은 사안에만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엇갈린 주장이 합

의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자칫 지금까지 공들여 진행된 공론화 방법론의 실현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4. 결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는 위험인식과 위험수용의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즉,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로 인한 갈등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적대적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후핵연료와 관계되는 개인, 그룹 간의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과 목적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입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라는 하나의 주제를 둘러싼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론화 대상으로 하고자하는 것이나 전문 영역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역할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논의가 일반 시민의 위험인식과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와 원자력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었다면 역으로 일반시민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 또한 일방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공론화가 애초의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공론화 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참여 범위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룬 다음 속의적 참여를 통해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형성하는 공론을 만들어가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은 전력기반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국가 중장기 관리 모델”개발 연구 결과입니다